
규제개혁 국제회의 참석 결과

2016. 6.

규제연구센터

I. 출장 개요

□ 목적

- 「규제개혁 : 새로운 접근, 새로운 도전」 및 「제8차 OECD 규제 성과 평가회의」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성과를 홍보하고 외국정부 및 OECD와의 규제분야 국제협력 강화

□ 기간 · 출장지 및 참석자

- (기간 · 출장지) 6.12(일) ~ 6.15(수), 호주 시드니
- (출장자) 강준미
- (참석자) 강영철 규제조정실장, 서영석 규제기획과제과장, 한태경 규제정책과 사무관, 조인완 전문위원(이상 국무조정실), 강준미 (KDI)

□ 출장일정 : 3박 5일, '16.6.12(일) ~ 16(목)

일시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업무수행내용
6.12(일)	서울 18:45		·출국 (KE0121, 약 10시간 30분 소요)
6.13(월)		시드니 06:15	·시드니 공항 도착
6.14(화)			· 「규제개혁 : 새로운 접근, 새로운 도전」 국제세미나 참석
6.15(수)			· 「제8차 OECD 규제 성과 평가 회의」 참석
6.16(목)	시드니 07:45	서울 17:45	·출국 (KE0122, 약 10시간 소요) ·인천공항 도착

□ 「규제개혁 : 새로운 접근, 새로운 도전」 주요 의제

- 규제개혁을 위한 각국의 혁신적 노력
- 규제개혁을 위한 행동 통찰력 적용 사례 연구
- 혁신 기술에 대한 규제 대응(규제당국의 직면과제와 사례연구의 교훈)

□ 「제8차 OECD 규제성과 평가회의」 주요 의제

- 역동적·포괄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의 영향과 성과
- 생산성 및 포괄적 향상에 있어서 규제정책의 역할

□ 주요활동

- ‘역동적·포괄적 경제 환경 조성을 향한 규제정책의 영향’ 관련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국제적 공유·전파
- OECD 사무국에서 제시하는 규제정책 전망 논의 및 향후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교환
- 호주 정부와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 및 협력 강화

II. 주요 논의내용

□ 규제개혁 : 새로운 접근, 새로운 도전

① Session 1 : 규제정책 관련 각국의 혁신

< OECD 규제정책국, Nick Malyshev : 각국의 규제혁신 노력 >

- 규제 혁신 자체 보다, 규제 혁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큰 과제
 - 규제 개혁을 통해 전략적인 내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규제환경 조성 필요

- 국가 발전을 위해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보다 젊은 기업 양성을 위해 혁신적 규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 필요
 - 이를 위해 시장진입 관련 규제의 혁신이 가장 중요, OECD에서는 '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'을 제작·배포, 이를 활용한 규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회원국들 독려
- 또한, 젊은 기업 양성을 위해서는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행정 부담 감축 노력 병행
 - 예컨대, 꼭 필요한 인증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는 없애 규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
- 결론적으로, 규제혁신을 위한 도구들을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

< 독일 내각사무처, Stephan Naundorf :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인식조사의 활용 >

- 1984년 규제개혁 추진 후, 독일은 여러 규제도구들을 적극 활용 중
 - 360°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이 시민·기업의 필요에 응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 수립단계에 적용
 - 하지만, 규제 제도를 혁신을 위한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등 어려움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규제자 입장에서 여러 규제개선 노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(2년마다 실시)
 - 규제 인식조사는 총 32개의 항목으로 누가, 어떻게 규제에 영향을 받는지를 피규제자 입장에서 구성
 - 총 32개의 항목 중 각 응답자들이 일생동안 직접 경험하는 아이의 출생, 실업, 창업 등에 대해 해당 규제의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
- 이에 더해, 상호작용 그래픽(Interactive graphical)을 사용,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에 겪는 여러 규제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연구 결과의 활용도 향상

< 에스토니아 법무부, Helena Braun : 전자정부 시스템>

- 에스토니아는 더 나은 규제의 초점을 규제의 디지털화에 맞추고, 국민·기업의 삶의 질 향상 및 정부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'e-Solutions'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
 - 전자정부는 기술적 측면 20%, 규제관련 정책 80% 차지
- 2003년부터 전자정부 포털(www.eesti.ee)이라는 원스톱 샵을 제공,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99%가 전자정부 포털로도 제공
 - 대표적 사례로 전자국회, 전자세금, 모바일주차, 전자법정 등이 있고, 결혼, 이혼, 재산권 관련업무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부 업무를 온라인상으로 해결 가능
- 전자정부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데이터 및 정보 교환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X-ROAD라는 보안 시스템 개발·활용
 - 이와 더불어, 전자정부 업무시 사용하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따로 발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
 - * 총 인구의 95% 전자 주민등록번호 발부, 현재 전체 국민의 절반이 활발히 사용 중
- 정부는 IT업계의 교육 및 기술발전 지원을 통해 전자정부를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올바른 조직관리 및 법체계의 수립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증진을 위해 노력
 - 정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신뢰하고, 국민은 정부를 신뢰해야 가장 큰 편익을 창출 가능
 -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업무를 조정

< 한국 국무조정실, 강영철 : 한국의 규제개혁 사례 >

- 한국정부는 대내외적인 경제상황 대응 및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규제개혁을 비롯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
- 규제개혁은 7대원칙 하 추진 중, 주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개혁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, 통과를 위해 노력 중
- 중앙정부, 지방정부, 피규제자의 물리적·심리적 거리감을 허물고 실시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생태계 개혁 중
 -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물리적,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규제개혁신문고, 규제정보포털 구축, 오프라인 방식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, 중소기업옴부즈만 설치
 - 규제개혁신문고 신설로 규제개혁 요구를 국민과 기업의 당연한 권리로 전환, 규제개혁의 단일창구로 규제정보포털 마련
 -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,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규제개혁 실시, 규제개혁의 체감도 향상
 - ‘전국규제지도’는 지자체의 규제개혁 정도를 평가·결과 공표, 지자체간 자율 경쟁 유도 및 지자체의 규제개혁 현황 공유
- 대통령의 강한 규제 의지로 전 내각이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
 - 국민, 기업인, 경제단체장, 관계장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5차례 직접 주재
 - 총리주재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규제개혁 방향 공유
 -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이 지방정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법령-자치법규 연계시스템 구축

- 최근 한국정부는 그간의 규제 혁신시스템을 혁신
 - 꼭 있어야하는 규제만 남아있을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혁파
-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 설치, 이를 통해 민간의 건의에 대한 규제개선여부를 민간이 결정,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 실시
- 인증, 지방규제, 공공조달 총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
 - 인증전수조사 실시, 전체 인증 203개를 131개로 감축
 - 38,915개의 지방규제 전수조사, 5천여건 개선 완료
 - 공공조달 전수조사 추진 중
- 완전한 규제개혁이 불가능한 경우, 지역적·시간적으로 규제개혁 실시
 -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지역별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, 관련 규제 완화
 - 한시적으로 규제유예 실시
- 웹베이스 기반의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규제비용총량제 실시
 - 22개 부처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중
 - 웹베이스 기반의 규제영향분석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, 담당 공무원 교육
- 규제개혁 효과의 조속한 현장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행태 중요
 - 신속처리, 사전해결, 신상필벌, 권익보호라는 4대 원칙하 공직자 소극행태 근절 위해 노력
-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는 경제적 효과로 입증
 - 규제개혁 현장 체감사례 200개 조사결과, '15년 151건에 대해 5.5조원 경제효과 체감, 49건은 올해안 15.2조원 규모의 경제효과 발생 예상

○ 규제개혁 성공사례

- 입지규제 개선으로 막혀있던 반월산단 반도체 증설 착공,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추진되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
- 기업부담을 경감하여 카셰어링 등 신사업 기회 확대

< 뉴질랜드 혁신&고용 사업부, Jonathan Ayto&Michael Bird : 뉴질랜드의 규제혁신 사례 >

○ 뉴질랜드 규제 관리체계의 현황

- 지속적인 관심을 도모하여 규제의 효과적 관리체계 구성
- 규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규제의 주체 및 역할, 목적,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
- 이러한 규제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규제를 자산으로 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는 행동들에 대처하는 규제관리 통합시스템을 실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

○ 규제 관리체계 사례

- '13년 뉴질랜드 정부는 “규제 관리의 초기 기대치”를 설정, 부처 장관들의 공적 업무 의무에 추가로 규정
- 이러한 노력은 7대 주요 규제 정책기관들이 구체적인 관리 계획 등을 제시함으로써 뉴질랜드 공공 관리 제도에 반영

○ 정부차원에서 규제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

- 뉴질랜드 생산성위원회는 선정된 주제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, '14년 위원회는 뉴질랜드의 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를 진행,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 및 연구
- 특히 노동층의 역량 및 규제 관련 계층의 역량개발 및 강화를 중점적으로 분석

② Session 2 : 규제개혁을 위한 행동경제 적용 사례 연구

< 호주 내각부, Michael Hiscox >

○ 호주정부 행동경제팀(BETA) 소개

- 호주 내각부 산하 행동경제팀은 14개 행정기관의 공동계획으로 창설, 행동경제학을 호주의 정책, 국정과제, 행정계획에 최초로 적용 시도한 중앙행정부서
- 행동경제팀은 호주정부가 정책설계와 이행에 있어 행동경제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정책설계 관련, 행동경제학의 중요성

- 행동경제학 정책의 핵심은 국민이 본인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·교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체계화
- 인식의 한계·편향, 불완전한 자율규제, 다양한 동기 및 사회적 규범 등 개개인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조사·분석을 통해 국민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와 정보전달정책 설계
- 행동경제학은 주로 사람의 △현재지향성 △손실회피심리 △현상 유지편향 △인식의 한계 △자기통제력 △암묵적 편향성 △사회적 규범 △이타주의 등을 정책설계 핵심요소로 설정
- 미국, 영국, 호주정부는 행동경제학을 적극 활용
 - * 미국 : 알림메시지 전송을 통해 예방접종률 12%증가 달성
 - 영국 : 호혜적 이타주의 동기부여 메시지를 통해 매년 100,000건의 추가 장기기증 기록

○ 행동경제 적용방법

- 호주정부 행동경제팀은 피규제자의 행동 데이터분석, 정책설계, 무작위대조연구 후, 정책안 시범 시행·모니터링 추진

- 금융, 조세, 환경, 보건, 교육, 산업, 환경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적용

< 호주 모나쉬대학, Liam Smith >

- 특정 행동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설계 및 입안의 핵심요소는
 △문제점 파악 △행동변화 정책안 설계 △신속한 분석·평가
 △문헌 및 선행연구 조사 △관찰 및 인터뷰 △워크숍 추진 △시범시행 등
- 가장 핵심인 문제점 파악 단계에선 대상판단, 조사방법 선택, 데이터 발굴 등의 절차 포함
- 관찰 및 인터뷰 단계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규범, 습관, 감정, 편향성 등을 면밀히 조사
- 호주의 성공사례
 - 행동경제학에 기반을 둔 호주정부의 정책 중, 흡연을 감축정책, 도로안전 정책, 산업안전 정책 등에서 큰 성과를 달성

< 호주 국세청, Michael Zeitlhofer >

- 호주 국세청은 조세 및 연금정책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할 위해 행동경제학을 적극 활용
 - 행동경제학 기반 정책수립 방안을 전 부처에 전면 도입 추진 중
 - 국세청 내 행동경제팀(BI Unit)을 구축, 호주 내각부 행동경제팀과 긴밀하게 협력
 - 국세청은 지속가능한 행동경제 기반 정책의 제도적 틀 구축, 행동경제 도입 유인 및 역량강화, 기업 컨설팅 제공, 행동경제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노력
- 호주국세청의 행동경제 성공사례
 - 세금납부 관련, 130만 명의 예상되는 세금 미납자 중 24.7만 명

- 에게 맞춤형 메시지 전송, 13억 달러의 미납액 중 8.3억 달러 징수
- 웹기반 채무징수 전면 도입 및 디자인 간소화

③ Session 3 : 혁신기술에 대한 규제 대응

< 호주 생산성위원회, Jenny Gordon >

- 정부는 시장규제, 시장견인, 위험요소 감축, 서비스 전달 등의 역할을 이행,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, 근로자, 개인 및 가정을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연계
- 정부의 시장규제 역할
 - 규제는 시장지배력 모니터링, 지대추구 방지, 시장접근 방해요소 철폐, 시장경쟁 고취 등 기능
 - 정부는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신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관리 및 규제의 규모가 큰 시장 조사·관리
 -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이점이 있지만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과 소비자 니즈의 충족을 위해 규제도입 필요
- 정부의 위험요소 감축 역할
 - 디지털 플랫폼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조정, 업무형식 변혁, 임시직종 증가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 개선
 - 공유경제 분야에서 서비스 공급자, 소비자, 근로자 등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평한 경쟁을 유인하는 규제정책 수립
 - 디지털 활용도가 증가할수록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필요
- 정부는 적극적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, 규제순응 비용감축 및 순응도 향상
 -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통한 규제 질 관리방안 검토 필요

< 호주 증권투자위원회, John Price >

- '호주 증권투자위원회 혁신허브'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현행 규제시스템을 정확히 숙지, 준수하는 것을 적극 지원
 - 특히,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은 인허가 취득과정에서 비공식적 지원을 제공
 - 핀테크 커뮤니티와 긴밀한 소통·협력을 통해 규제원칙을 지키면서 인허가 취득과정 간소화, 소비자·투자자 보호 등의 혁신적 노력 중
-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의 성과
 - '호주 증권투자위원회 혁신허브'는 총 93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에 지원
 - ※ 디지털자문 24건, 시장형 대출 20건, 송금·납부 14건, 소비자신용 10건, 크라우드펀딩 7건, 기타 18건
 - 총 67개의 기업이 자문·지원 신청, 120건 이상의 이해관계자 대면회의 실시, 21개의 금융서비스면허·자격증 발부 등의 성과 달성
 - 혁신허브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85%의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은 타 기업에도 추천의향 표명

<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, Barbara Wise >

- 시장실패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정책
 - 호주의 NSW주 정부는 카셰어링 서비스 법제화 추진
 -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비용은 절감되되 차·차주 인허가, 등록 필수화 및 예약제 도입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신설·강화

- 신산업·신기술 분야 규제제도 재정비
 - 소비자중심 정책 수립, 시장의 다양성 인지, 위험기반 및 증거기반 인센티브 강화 등
-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추진결과,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따른 시장의 자율적 변화 유도 및 시장진입 방해요소 감소 등의 성과 달성

4 시사점

- 많은 국가에서 한국을 규제개혁의 대표 성공사례로 인식
 - 현재 진행중인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, 규제비용총량제, 규제신문고 등 규제시스템 개선에 많은 관심 표명
- 다양한 규제개혁 추진방식 모색
 - 국제적으로 새로운 추세인 규제개혁을 위한 행동경제학 적용 방법 및 사례 연구 필요
-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역할 및 향후 정부의 규제 정책 수립 방향 정립을 위한 논의
 - 피규제자 중심의 최소한의 규제 설계, 규제자-피규제자, 피규제자간 소통·협력·신뢰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등

□ 제8차 OECD 규제성과 평가회의

① 기조연설

< 호주 NSW 정부 : 호주의 혁신적 규제개혁 >

- 통제와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'규제'와 효과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'혁신'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'혁신적 규제' 방안 구축을 위한 방향 모색
 - 현대에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모든 규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
 - 소비자 중심의 규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실시간 정보 디지털화는 사전·사후평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혁신적 접근의 중요한 수단
- 호주의 혁신적 규제개혁 접근 소개
 - 호주 NSW주 정부는 구·신 IT시스템을 통합화·일원화하여 디지털 기반 'Service NSW'를 구축, 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주민과 기업이 하나의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서비스센터를 통해 모든 업무처리 가능, 이를 통해 98%의 소비자 만족도 달성 기록
 - * 통상 12달이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디지털 일원화를 통해 3개월로 단축
 - 규제개혁의 혁신에 있어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태 및 사고방식의 전환

< OECD :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>

-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
 - 생산성 증대,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 필요, 불필요한 행정규제(red tapes) 혁파 중요

- 규제개혁의 원칙과 수단에 있어 ‘2012 OECD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재차 강조
- 규제의 품질 관리·감독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의 중요성
 - 규제감독기관은 규제영향평가(RIA), 이해관계자 참여, 사후평가 등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 필요
 - ‘2015 OECD 규제정책전망’에 의하면 조사된 35개국 중 33개국은 규제감독기관을 통해 규제의 질 관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갖고 있으나, 그 중 1/3은 규제에 대한 순응 혹은 기존규제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
- 규제의 혁신적 접근
 - 전통적 형식을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,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규제설계 초기단계부터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
 - 특히, 빅데이터를 활용한 피규제자의 행동패턴 분석을 통해 발견되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예측되는 행동변화를 규제개선노력에 적용하는 방안 및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 등의 노력 필요

② 주제발표 : 생산성 및 포괄성 향상에 있어서 규제정책의 역할 **(OECD 규제정책위원회 위원장, Gary Bank)**

- 규제의 생애주기는 설계·설립(development), 심사(review), 전달(delivery) 등으로 이뤄지며,
 -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은 전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 중심적 역할 수행

- 더 나은 규제 of 방해요소는 기술적 어려움, 정치적·사회적 압력, 관료주의적 타성 등이 존재
 - 사회적 문제 발생시, 우선 규제를 신설 하고 사후분석을 통해 정당화 하는 방식은 질 낮은 규제 및 위험회피적 행정행태 양산
- 증거기반 접근의 필요성
 - 증거기반 정책의 경우, 문제발견→평가→대안→의사결정→설계→이행→심사의 단계를 거치는 반면,
 - 정책기반 입증의 경우, 문제발견→의사결정→설계→이행의 단계로 축소
 - 증거기반 접근의 장점은 △규제대상 및 목적 재검토 △피규제자에게 편익에 대한 정보전달 △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△의도치 않은 피해 최소화 등
- 규제정책과 실질적 이행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, 이는 제도적 틀, 즉 관리·감독체계가 잘 갖춰져야 극복 가능
 -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규제평가 기관은 정량분석 역량, 투명성, 독립성 및 규제수립 과정과의 연계성 필요(예, 호주와 뉴질랜드의 생산성위원회)
 - 규제감독기관은 우수사례 벤치마킹, 규제담당자 교육·훈련, 규제 모니터링, RIA 품질관리, 기존규제 사후평가 등의 역할 수행, 해당기관의 권한, 독립성, 투명성, 책임성 필요

③ 패널토론 : 역동적·포괄적 경제 환경조성을 향한 규제정책의 영향과 성과
 (한국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, 강영철, 호주 규제완화부 차관 Anthony Lean, 호주정부 행정경제팀장 Michael Hiscox)

- 피규제자들의 니즈를 실질적 정책결정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

- (Michael Hiscox) △미국의 경우, 미국시민 누구든지 개발프로젝트 제안 가능,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소량의 자금 제공 그 후, 제안자는 비용대비 효율성 분석 및 엄격한 성패검증을 통해 입증을 하면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자금 제공
△증거기반 규제정책도 같은 접근 가능, 규제정책의 설계단계 및 영향분석 시기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 독려 필요
- (Anthony Lean) △독립적인 규제감독기관에서 정부법안을 차단할 경우 신뢰성 하락 우려 △해당기관은 소관 부처, 비정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협력추진 및 행동경제, 데이터 수집,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증거에 기반을 둔 규제정비 필요
△정량적 조사 및 포커스그룹 정보수집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,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통해 실질적 정책입안에 반영 중요
- (강영철) △한국의 규개위는 24명의 위원으로 구성(정부위원 7명, 민간위원 17명) △규제조정실은 19명의 공무원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, 대안검토 및 국제기준과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담당
△신산업 투자위원회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, 규제형성 전 과정에 민간인의 적극 참여가 중요
-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핵심인 사후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
 - (Anthony Lean) △연구 혹은 정책에 있어 설계가 분석보다 중요
△정책설계 단계에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이 핵심적, 호주 정부는 공공 데이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역량강화 노력
 - (Michael Hiscox) △호주의 내각부 내 공공 데이터관리팀 구성
△학계 또는 외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데이터 우선순위 결정 및 공개여부 판단 및 공개예고 등을 과정을 거쳐 정책설계에 데이터 적극 활용을 독려

- (강영철) 한국은 일몰제를 통해 사후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의무화

○ 범 부처 규제개혁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논의

- (Michael Hiscox) 정책수립 시 타 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중요
 - * (사례) 침대방충망 보급정책 설계단계 전부터 설문조사 및 정량적 조사를 통해 보급된 지역, 개수, 영향정도 등을 분석하여 방충망 사업에의 1달러 투자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데이터화 하여 정책입안
- (Anthony Lean)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제 혁파 그리고 실시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핵심
- (강영철) 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협력 필요성 강조(특히, 산업안전규제는 다부처와 관계되므로 다부처간 협력이 중요)

④ 주제발표 : 규제개혁으로 얻는 생산성과 복지에 대한 평가
(호주 생산성위원회 위원장, Jenny Gordon)

- 시장실패 요인분석, 시장기능 개선 및 저비용·무비용 개선 등의 원칙 적용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필요
 - 원칙적용 규제개혁 추진시 원칙이 기존환경에 적용이 되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구축 필요
 - 직·간접비용 및 편익에 대한 부분적·전체적 분석을 통해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 판단
-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정량적 규제영향평가 필요
 - 부분균형분석, 일반균형분석 또는 행동경제 형식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분석기법 및 무작위 대조군 연구, 자연실험, 회귀분석 등의 통계도구 활용가능

5 시사점

-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증거기반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
 - 기존의 정책기반 정책설계에서 벗어나 증거기반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규제의 순응도 향상, 부작용 최소화
 - 증거기반 정책설계를 위한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, 현재 일몰제도가 사후평가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내실화 필요
- 이해관계자의 참여·소통의 중요성 인식 및 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
 - 전통적 규제관리에서 나아가 규제 품질의 관리·감독을 위해 규제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은 무엇보다 중요
 - 효율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각국의 노력에 대해 공유
- 향후 규제개혁 선도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 국의 규제개혁 동향 파악 필요
 - 규제개혁은 국내적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국가간 상호작용 및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성과를 홍보하는 것뿐 아니라, 다른 나라의 규제개혁 현황에도 관심 필요

□ 호주정부와 규제협력 논의

① 참석자

- (호주측) 내각부 제1차관보 Peter Saunders,
외교부 차관보 Joanne Loundes
- (우리측)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, 기획과제과장, 규제정책과
사무관 및 전문위원

② 주요 논의 내용

- (한국의 규제개혁 노력) 한국은 △규제개혁장관회의 부처별 규제 개혁성과 보고 △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한 규제개선 △기존 인증 규제 전면정비 △규제개혁종합계획 수립 및 부처에 시달 등 노력을 통해 호혜적인 투자 및 무역환경을 조성
 - 호주정부는 호주 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해 관심을 높은 관심을 보이며, 주요 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는 점을 표명
- (국제기준 부합) 한국은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, 특히 신산업분야의 경우 국제기준 적합성을 엄격히 검토(예, 전기 자동차 도입 시 EU기준 준용)
- (규제개혁 평가) 매년 실시하는 정부업무평가 중 항목으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평가(전체 업무평가 배점 100점 중 25점 차지),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
 - 대한상의,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실시, 국조실에서도 매년 규제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
- (규제영향분석) 규제영향분석서는 부처 내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·심사를 받아 국무회의 상정

- e-RIA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규제영향분석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지원, 비용편익 자동계산 기능을 통해 규제영향평가서의 질 향상
- 호주 정부는 e-RIA, 비용편익 자동계산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임

③ 향후 계획

- 호주 정부와 규제협력 분야 관련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유지